

해명자료

문의 : 네트워크정책국 인터넷정책과 홍진배 과장(☎750-2730)
인터넷정책과 박현선 주무관(☎750-2732) phsunny@kcc.go.kr

‘인터넷업계 기금출연 압박’ 사실과 달라 - 인터넷사업자 상생협의체 기금출연 요구 한적 없음 -

‘10. 04. 12(월) ‘인터넷업계 기금출연 압박 올상’ 제목의 기사(디지털타임즈, 4면)가 보도되었으나 이는 사실과 달라 바로잡습니다.

<보도내용>

- ☐ 인터넷 포털업체들은 빠르면 4월 중 출범할 인터넷 사업자 상생 협의체에 기금출연을 요구받고 있다.
- ☐ 방통위도 표면적으로 기금조성을 강제하고 있진 않지만, 사회적 역할을 하는 차원에서의 ‘성의표시’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.

<해명내용>

- ☐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상생협의체 구성 관련 어떠한 형태의 기금의 조성 계획을 발표한 바 없습니다.
 - ☐ 방통위는 기금조성을 위해 재원을 민간기업으로부터 조달한 다거나, 특정기업과 기금에 대해 논의한 사실도 없습니다.
- ※ 방통위에서는 지난 국감 등을 통하여 허가대상이 아닌 사업자로부터의 출연 어려움, 해외 포탈과의 역차별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. 끝.